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을 생각하며

조 규 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전 주 브라질 대사

국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꿈을 꾼다. 1776년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했던 신생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륙을 가로질러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꿈을 꾸었고, 그로부터 70년 후 멕시코와 전쟁 끝에 지금의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5개주를 매입함으로써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열었다.

우리에게도 꿈이 실현되었던 위대한 역사의 장이 많다. 멀리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대정복과 신라의 삼국통일 위업도 꿈의 결실이고, 가까이는 1960년대 '잘 살아보세' 꿈과 80년대 민주화의 꿈은 오늘의 발전된 한국의 모습으로 실현되었다.

중국도 꿈을 꾸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당 총서기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中國夢)을 천명하였다. '중국의 꿈'이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13억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해석도 있고, 중국 전래의 유교문화와 공자사상의 회복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중국의 꿈'을 발표한 장소가 국립박물관이라는 사실이 내용보다 더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립박물관은 아편전쟁(1840)이래 중국이 서방 열강에 의해 당했던 '굴욕의 세기'를 공산당이 영광스럽게 만회했음을 가르치는 선전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의 꿈'이 어떤 함의를 갖던 그것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거인의 귀환과 같이 불안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일본의 아베 총리가 꾸는 꿈에는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다. 작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아베 총리가 보인 대외침략 부인 발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허용 등 우경화 행보는 그의 역사 인식이 퇴행적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더욱이 지난달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상하원을 다 장악한 아베의 자민당이 이른바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과 같은 국수주의 기치를 더욱 노골적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걱정된다.

만에 하나 중국의 정책에서 패권주의적 색채가 엿보인다면 우리는 우려와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조짐에는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역 내외 국가들과 공동 대응하는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찾는 일이다. 과연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해답을 백범 김구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919년 3·1 운동 이후 25년 동안 중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며, 해외독립운동의 본산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1945년 8·15 해방 이후 혼란의 좌우대립 속에서 민족자존과 독립사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분투하였던 백범이 꿈꾸었던 나라는 민족이 하나 되어 문화로 융성하는 나라였다.

그러기에 선생은 "몸이 반으로 갈라질지언정 허리 끊어진 조국은 차마 볼 수 없노라" 절규했고, "한없이 갖길 원하는 것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닌 오직 높은 문화의 힘"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21세기, 더욱 빠르게 진전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생존경쟁의 단위로서 민족의 개념이 중요시되고, 문화와 지식이 한 나라 국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 된 우리 민족이 창의문화로 우뚝 서길 바랐던 백범의 꿈이야말로 참으로 오늘 이 시대를 예견한 혜안이요,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

평생 교육자로 자처했던 선생이 저서 '백범일지'를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로 마무리지으며 글 끝에서 "천하의 교육자와 남녀 학도들이 한번 크게 마음을 고쳐먹기를 빌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신 호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들리는 요즘이다. 이달 17일(음력 7월11일)은 백범 탄신 137주년이다.

의료칼럼

건강한 S라인 만들기

김 태 호
광주우리들병원 원장

장마가 지나가고 해수욕장으로 달려가는 무더운 여름날, 여성의 최대 꿈은 아름다운 허리의 S라인이다.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오는 S라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S라인 뿐만 아니라 건강의 S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왜냐하면 척추가 바로 서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척추는 목 부위의 경추 7개와 가슴 부위의 흉추 12개가 있다. 그리고 허리 부위의 요추 5개와 천추 및 미추 등 총 26개로 구성돼 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일직선으로 척추가 바로 서야 한다. 하지만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2중 S자 모양으로 연결돼 있어야 건강한 척추라고 한다.

척추 뼈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우리가 뛰거나 걷거나 움직이는 등 인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한다. 즉 척추는 인체에 있어 기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직립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신체부위다.

과거에는 척추질환을 고령의 나이에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컴퓨터를 함으로써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해 젊은층도 요통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도 많은 학습시간 등으로 인해 척추 질환을 앓는 경우마저 부모들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척추의 구조를 이해함과 동시에 바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똑바로 서 있을 때 허리의 부담이 100이라고 할 때 등받이 없는 의자는 140, 앉아서 앞으로 허리를 숙일 때 180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바닥에 앉아서 허리를 비트는 습관, 구부정한 자세로 컴퓨터를 하는 습관,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등 반복되는 잘못된 자세는 척추를 망치는 첩경이다. 단시간에 허리가 망가지지는 않지만 작은 잘못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커다란 충격이나 특별한 외상이 없이도 심각한 척추 질환이 올 수 있다. 평소에 잘못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먼저 허리를 곧게 펴고 생활하는 것이 좋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적당한 간격으로 일어나서 허리운동을 하면 좋다. 앉을 때도 방바닥보다 의자나 소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조그마한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허리보다도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서 들어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하지만, 높은 산을 오르거나 달리지는 말 것을 권한다. 달리거나 산을 내려갈 때 몸무게를 척추에 전달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당부한다. 특히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내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잠자리는 특별히 좋은 자세가 있는 것은 아니며 편한 자세가 좋고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침대나 소파, 그리고 식탁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올바른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허리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운전이나 업무 중에 반드시 허리의 긴장을 풀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허리에 조그마한 증상이 있으면 쉬어주는 것도 최상의 방법이다.

기고

광주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있는가

임 효 택
광주수영연맹 전무이사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할 노릇이다. 요즘 광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천불나서 못 견딜 지경이다.

광주시가 2년간 각고의 준비 끝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정부의 예산지원 불가방침에 지역은 발칵 뒤집혔는데도 민주당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한 두 명의 국회의원이 "공문서 위조문제와 정부의 재정지원은 구분해야 한다"고 논평했지만 지역 언론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은 뭐하냐"는 호된 질책을 받은 뒤에서야 마지못해 나선 느낌이었다.

더욱 꼴불견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국회의원들은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역 및 기초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치인들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하는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과연 그들이 시장출마 후보자로 거론될 자격이나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광주가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대회규모는 전 세계 202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해 1개월 동안 열린다. 올림픽, 월드컵에 이은 3대 메가이벤트 스포츠 대회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전 세계 약 10억 명이 실시간으로 TV중계를 시청하고 언론을 통해 45억여 명에 광주라는 도시가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회를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광주가 유치했는데도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광주시가 치열한 외교전 끝에 대회를 유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빚어진 잘못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모든 성과가 폄훼당하고 있다.

대회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공문서 위조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지, 정부가 감정적으로 "광주시 혼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분분했던 지역 여론도 공문서 위조문제는 법적 판단에 맡기되 정부가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이 제 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광주시와의 공조체제는커녕 일부러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어떠한 상황이 더 자신에게 유리할까 부지런히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동료 의원들의 눈치만을 살피다 결국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역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지역구 문제해결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이 어려울 때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어하고, 또 정부를 상대로 설득시키는 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다.

민주당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광주를 '민주당 텃밭이자 뿌리'라며 호소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입지만을 따져 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 수영대회 사태를 '남의 집 불구경'하는 식으로 대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놓고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을 자처하며 출마하고, 또 지지를 호소할 텐가.

정부 예산 늘려 농촌 슬레이트 지붕 조속 철거해야

슬레이트가 석면 가루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유명한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 슬레이트 지붕은 도시에서는 거의 다 철거해줬지만 농촌에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이걸 철거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필자의 고향인 전라남도 무안에 가면 이렇게 슬레이트로 집을 지어 지붕을 쌓은 농가가 여전히 많다. 이것은 필자의 고향만의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이게 과거 새마을운동 때 정부에서 농촌 지붕을 다 덮은 것이다. 그러니 국가 시책에 따라 정부가 시키는 데로 한 농민들은 죄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이걸 걷어 줘야 하는데 여전히 별다른 진척이 없어서 답답하고 안타깝다.

현재 농어촌에는 57만채 정도가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장 57만채나 되는 지붕을 전부 철거하기는 어렵다 해도 최소한 10%는 치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차후에 연차적으로 20%, 30% 이렇게 늘려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지지부진 상태라 농촌에 어딜 가봐도 슬레이트 지붕은 그대로 석면 가루를 날리고 있다.

지금 FTA다 구제역이다 해서 농민들은 농가소득이 떨어져 견뎌내기 벅찬 상황이다. 그런데 폐슬레트마저 농민들이 자비를 들여서 처리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불가능하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므로 이 슬레이트 지붕을 더 이상 농촌에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하루빨리 철저하게 치워야 하는 이것을 농민 개인에게 미룰 게 아니라 정부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속히 제거해 주기 바란다.

▲이영희·광주시 서구 양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박근혜 정부, 호남은 안중에도 없는가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에 '역주행'하고 있다. 이 정권 때 지역의 반발로 좌초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하는가하면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린다며 지방세인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정하고,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지역에 대한 배려 없이 정책을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과학관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해야할 국립시설인데도 법인화로 전환해 광주시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방침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사건 또한 법적 판단과 재정 지원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빌미로 예산지원 철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가 이미 지원하고 있는 F1대회도 앞으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대선공약 사업에 있어서도 경제성을 앞세운 예비타당성 조사가 선행되면서 광주·전남 각 11개 신규사업 가운데 90% 이상이 후순위로 밀릴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결정할 내년도 중요 신규사업 역시 기획재정부가 대부분 문제사업으로 분류해 이마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이 모든 게 기정사실화된다면 경제여건이 가장 열악한 광주·전남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의 낙후가 가속화될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다시금 주목한다.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해야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국민대통합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투쟁이라도 해야 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호남 홀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정착 아직 멀었다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자들의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방이 등장하는가 하면 정류장 흡연 등 갖가지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중이용시설 금연정책의 정착이 녹록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담당구역조차 맡지 못해 단속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니 전시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금연단속에 따른 풍선효과는 이미 예견됐었다. PC방이 흡연방으로 둔갑, 불법운영을 다반사로 하고, 보행흡연을 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금연단속 확대가 되레 간접흡연의 피해를 키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속 인력의 태부족도 금연 확대 정책의 발목을 잡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15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단속을 한 결과, 광주는 444곳에서 흡연자 12명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단속을 실시한 4595곳에서 흡연자 18명을 적발, 4명에게 과태료 24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진 구역은 전체 대상업소 중 광주는 고작 5.2%, 전남은 32.9%에 불과했다. 이렇다면 흡연자들이 과연 단속을 두려워하겠는가.

공중이용시설 금연단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홍보와 단속 의지, 그리고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인력 부족 탓에 상시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짝단속에 그쳐선 안 된다.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위해 음식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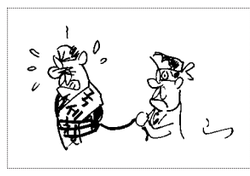
또, 강력한 단속과 병행에 흡연자들이 금연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담배 피우는 일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자각하게 해야 금연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

無 等 鼓

국세청장 수난사

국세청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청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되는 국세청의 기관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과거에 비해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세금 징수권, 세무조사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권력기관으로 통한다.

국세청이 지난 1966년 재무부 사세국에서 분리, 외청으로 독립된 이래 배출된 국세청장 중 8명은 장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권력과의 유착이나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 각종 비리나 의혹에 연루되면서 옥고를 치르거나 불명예 퇴진한 청장도 많았다.



실제, 초대 이낙선 청장부터 김덕중 현 청장의 전임자인 19대 이현동 전 청장에 이르기까지 이 중 무려 8명이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5대 안무혁, 6대 성용욱 전 청장은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각각 안기부장과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불법 선거자금을 거둬들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임채주 전 청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세풍' 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대 안정남 전 청장은 2001년 9월 건교부 장관으로 기용됐으나 부동산 투기, 증여세 포탈 등 의혹이 제기돼 취임 20여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했다. 최초의 호남 출신인 13대 손영래 전 청장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15대 이주성 전 청장 역시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대 전군표 전 총장도 지난 2007년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 상납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6년만에 다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모두가 돈과 권력을 노리고 모이는 '불나방'의 꼼에 빠지거나 스스로 자신의 막강한 권한을 주체하지 못해 패가 망신한 것이다.

국회에서 국세청장 2년 임기제, 국세청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법 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다시는 국세청장 수난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